

후속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제목	[후속보도자료]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발송일	2022년 5월 23일(월)

[기자회견]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1소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회의에는 전원 불참하고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공청회를 날짜를 잡은 것을 '강행처리' '또 다른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3. 몇 주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지역, 직업, 지지정당, 연령을 불문하고 전분야에서 찬성여론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택한 이들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 불통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혐오의 언어와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혐오로 정치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법안의 심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3일 월요일 오후 1시, 차별을 수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나서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저버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이미 한 달 전, 4월 26일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야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섰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묻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차별금지법안 심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시민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인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인 법안 심사 조차 이토록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는 강행처리 프레임은 평등을 열망해온 시민들의 15년간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이이라면 입법과정을 저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즉각 심사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5년 국회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법률과 조례, 정책을 후퇴시키는데 나섰던 국민의힘이기에 이번 행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둔

집권여당이 아닌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하시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국회앞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농성과 단식투쟁 43일차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비우는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평등의 봄을 쟁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응답을 공청회로 끝내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건강부회격 차별금지법 저지 꼼수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마라.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더더욱 신속처리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여 국민의 힘을 입법 절차 과정에 끌어 앉혀야 한다. 그것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개혁을 자처하는 정당의 책무다. 이에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꿔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할 권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등 돌린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막아서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을 수호하는 횡포를 멈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하여 평등 수호에 나서라.

2022년 5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석자 발언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시민의 자유권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아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가 곡기를 끊은 지 30일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 40일을 넘겼다. 이들은 왜 자신의 기본권인 생명권까지 내어놓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던 간에 세상에 태어난 개개인은 모두 평등하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 핵심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선언만으로는 개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했고,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동의한다면, 헌법을 존중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두 팔 벌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유에 반하는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행태로써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미류와 종결, 두 활동가뿐만 아니라 차별과 억압, 폭력에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다수에게 억압과 폭정을 행하는 것이다.

반자유주의적, 반헌법적 집단이라는 규정이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길 바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핑계를 대며 떼쓰는 짓을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임하라. 그것이 시민으로부터 임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의원과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고, 시민에 대해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단 하나의 여론조사만으로도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뭘 머뭇거리는가? 자신들만의 자유를 위해 시민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속셈이 아니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방해하는 짓을 멈추고,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서 국민의힘이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때문이기도 하다. 21세기에 법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결국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기득권의 자유만을 위한 민주주의란 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차별금지법을 15년이 지나도록 제정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이란 말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면,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제1야당인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으로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지방선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법 제정을 완성해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무이다. 나중은 없다.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반가울 일이 아닌데 와서 마이크 드는게 슬픔니다.

국민의힘의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횡포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바닥을 기어가면서 권리에산을 말하고 있고 100여명 가까이 삭발하는 현실에서도 이 정부는 결코 어떤 것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 힘이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묵부답 하고, 지하철을 기고 삭발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는 것이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시민들을 갈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유와 인권을 하나의 장식품처럼 이야기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지하철 바닥을 기는 장애인과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와서 그에 대해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의이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대면서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던 것에 더 화가 납니다. 국민의 힘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와 횡포가 놀랍지도 않고 결코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힘은 어쩌면 당연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를 조장하는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여태까지 1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엇을 했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15년 동안 외치는 동안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정말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라고 포기하게 할 것 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혐오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횡포와 저지를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까지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무엇을 위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2019년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칭찬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은 익산시청 앞에서, 국회 앞에서 울분을 토해내며 “차별을 멈추라”라고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은평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다문화가족을 혐오, 비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언행은 그가 평소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졌던 인식 수준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사무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혐오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년이 넘도록 이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주민 직원이 겪는 임금과 처우에 대한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진정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각판정이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공영역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의 심각한 문제는 차별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제도적으로, 일상적으로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출신국, 피부색, 언어, 성별 등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선을 만드는 제도적 출발입니다. 차별금지법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 지정은 강행이 아니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생명을 걸어 평등의 걸음을 걷고 있는 단식자들과 동조단식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차별금지법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지정은 평등으로 가는 15년간 미뤄온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별을 멈추고 평등에 함께 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국민의힘은 차별 앞에 침묵하는 정치 멈추고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윤정권은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지우면서 차별을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의 이면에는 뿌리 깊은 젠더폭력의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N번방, 군대 내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 이슈들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불처벌의 문화와 성폭력·성차별을 용인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사회구조는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을 자행한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수십년간 침묵당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님의 공개증언을 시작으로 용기있게 피해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정대협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 수많은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 1993년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 돌봄과 지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으로 확장되어 현재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존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6일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듯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성들은 누군가의 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오를 이용하는 정치, 혐오 앞에 침묵하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혐오선동세력들을 보며 수요시위 옆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여성혐오를 일삼는 역사부정세력을 떠올립니다. 피해자, 소수자에게 차별의 화살을 돌리는 혐오세력들과 이를 용인하는 정치,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평등으로 나아가는 세상, 환대와 존중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을 외치며 국회 앞에 나올 때마다 식민지배, 가부장제, 성차별의 구조를 깨고 #미투, #위드유를 이끌어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과 첫 수요시위를 생각합니다. 세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던 시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은 용기 있게 증언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차별과 폭력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인권과 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속 이어져오는 뿌리 깊은 차별의 구조를 바꿔가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심사에 제대로 임하라!
국민의힘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국민의힘은 혐오정치 그만하고 평등사회를 위해 노력하라!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국회 앞에서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농성에 돌입한지 43일째입니다. 평등을 선언하라는 이 요구는 이미 15년 째 이어져온 요구입니다. 몇 주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론이 70%에 육박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이토록 높은 지지를 받는 법안이 오직

국회에서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참 뒤늦게서야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늦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임에도 그마저도 국민의힘은 참여를 거부하여 국회에서 시작된 논의의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도대체 이 정당은 뭐하는 곳입니까.

국민의힘 당헌을 보았습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되며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결혼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어떤 시민은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어떤 시민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그들을 위한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모든 시민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위해 평등을,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혐오정치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하리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권여당으로서의 헌법 정신의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공청회로 끝낼 생각 마십시오. 국민의힘 핑계대며 평등을 미뤘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없으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더더욱 신속처리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여 국민의 힘을 입법 절차 과정에 동참하도록 해야합니다.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과반의석 쥐지 않았습니까 그에 맞게 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심지어 개혁을 자처하는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에 답변 요구서를 전달합니다. 어떤 답을 내놓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횡포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평등으로 같이 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지금 당장 제대로 수행하십시오. 평등할 권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에 이제 국회는 제대로 입법절차를 밟아 평등의 봄을 시민들과 함께 선언하십시오.